

【 2017.7.12(수)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2일 오전
11시 평창 용평
리조트 그랜드
볼룸에서 '2017
년 제1회 임시총

회'를 개최.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12일 오전 11시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
회 임시총회를 개최
한다.

건협 강원도회, 오늘 제1회 임시총회... 현안 등 협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2일 오전 11시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협회 제4대 대표회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회원 간 상견례와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총회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2007년부터 대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도내 503개 회원사 중 105개사 대표이사로 구

성돼 있다. 임기는 4년이다. 협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회원사로 구성된 서포터스(응원단)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입장권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사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오는 9월 입장권을 일괄 구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협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선 불황 '직격탄'... 인프라 건설로 지역 살려야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인 울산은 조선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의 건설을 통해 울산의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김임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의 산업수도로 불렸던 울산은 조선산업 쇠퇴로 인해 지역경제 역시 부진을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진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는 총 13곳이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중구 옥교동, 북구 염포동, 동구 방어진 등 3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10곳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조선소와 인접해 있는 울산 동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며, 다른 지역도 조속히 진행돼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한 지가 20년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SOC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산업도시 특성을 살린 SOC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시설이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국립3D프린팅연구원, 국립산재병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 원전해체센터 등이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 가운데 ‘울산 도시외곽순환도로’의 조기 착공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주요 기간산업이 집중된 울산에서 물류비용 절감과 울산 동북부의 화물 물동량(화물차 비율 34%)의 도심 통행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산업首都’ 동력 상실 도시재생·SOC 건설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시급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절실

김 회장은 “울산은 광역시 중 외곽순환 고속도로망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며 “향후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약속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외 공동도급 대상 공사 확대 등이 대표적인 대책이다. 인력, 자금, 공사 등 역외 유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중합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50위 내 업체가 전체 기성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건설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별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

도 지적했다. 그는 “복지에산 증가로 인해 SOC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낙찰률이 현저하게 낮아 어렵게 공사를 낙찰받았음에도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수익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적자시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공공공사 입찰 방법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는 낙찰률이 최저 70%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전 최저가낙찰제와 진배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낙찰률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일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 인프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개선을 위한 법·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있는 행위, 재정투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정부와 지자체를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 스스로도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성실 시공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은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공학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건설산업은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책임져 온 원동력 중의 하나”라면서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70년을 준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